



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음

〈보도 주요내용〉

12.4.(월) 서울경제 「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%→26%로 반토막」 등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계획인 50%에서 26%로 대폭 삭감하였으며,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정부는 「‘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(’23.7.4)」에서 국가전략기술,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발표 시 수도권·비수도권의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으며,

이후 유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*(산업부고시, ‘23.11.30 개정)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·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필요성, 지역발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.

* 「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

특히,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수도권 보조금 지원*은 이번 개편 시 신설하였으며, 투자보조금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·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정하였습니다.

* (기존) 첨단업종에 한해 투자금의 11% 지원 → (개정) 국가첨단전략기술 26% 지원 신설

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현진	(044-203-4090)
	해외투자과	담당자	사무관	이경진	(044-203-4095)